

# [2023년도(제11회) 행정절차론 총평]

## 1. 2023년 행정절차론

문제 난이도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과거 기출에 비해서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을 두렵게 하는 소위 불의타에 해당하는 문제도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짧은 시험 시간 내에 긴 문제 지문에서 요구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여 작성해야 하기에 답안 작성이 쉬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2. 각 문제별 분석

### [문제 1]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물음입니다. 중요한 논점이고 논점 제시형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1번은 사례형 문제로 사안의 적용과 해결이 중요합니다. 점수 획득의 포인트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물음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하였는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조사 당시의 사정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첫 번째 물음은 사전통지 기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는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 이는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조사 당시의 사정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예외사유로 규정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서 해당 처분의 성질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판례가 반복하여 언급하는 판단 기준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한지 여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와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를 물음 1과 물음 2의 답변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2]**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 공개는 가능하다’라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조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부분공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부분공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설명하고 그 규정의 내용을 사안에 적용하여 전부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셨다면 좋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문제 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요건과 행정청의 조치를 목차로 해당 규정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와 변경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정정사유와 변경사유를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